

광주·전남 벌써 223개...내실화가 성공 열쇠

내일 협동조합의 날...현황과 과제

부도회사 인수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문지마 설립 난무... 성공모델 찾기 어려워

지난해 처음 제도화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모델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광주는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협동조합 수가 많은 정도로 협동조합 선도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선 경제모델인 탓에 사업 내실화와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외형 성장만으로는 성공적 대안 경제 모델로 안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 6월 제 1회 협동조합의 날 맞아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봤다.

◇7개월 만에 광주·전남 200개 돌파=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6월 말 전국에 146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는 15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65건이었다. 지난해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을 재화나 용역을 협동으로 구매·생산·판매·제공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 수협, 신협 등과 관련한 8개의 특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조합 설립에 제약이 많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목적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상호·공제 등 금융업종만 제외하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형태 다양각색=협동조합의 형태는 다양각색이다. 광주는 제 1회 협동조합인 '더불어樂(락)'을 시작으로 청소박사, 행복빛고을, 클린광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더불어樂(락)'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광산

구 월곡시장에서 팔죽 등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청소박사는 자활기업 근무 경험자들이 만든 청소용역 협동조합이며, 생활·산업폐기물 운반 협동조합인 클린광산은 청소용역 노조원 13명이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자 직접 인수·설립했다.

전국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사업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고,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다문화가정,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모여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조합을 만든 예도 많았다.

◇'문지마' 설립 실패 지름길 우려=제도가 마련된 지 반년이 넘어가면서 협동조합 수는 빠르게 불어났지만, 성공적인 사업모델은 거의 찾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면 조합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토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만, 설립에만 급급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오는 2014년까지 모범 협동조합 300개 설립 지원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월 넷째 주 목

요일을 협동조합 교육의 날로 정해 1000여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에서 협동조합 모범 도시로 꼽히고 있다.

◇자금 고충도 문제정부 제도개선 실태조사 나서기로=제도적 미비점도 적지 않다. 특히 많은 협동조합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협동조합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을 내놓고 협동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협동조합 특별보증'을 신설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신용보증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수단이 제도화돼 있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지는 것은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정부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책 등 다른 지원정책을 아울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축제 어찌라고...

유진룡 문광장관 "국고지원 대폭 축소"

광주·전남 지역 문화사업 위축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지원 문화사업과 지역축제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발표해 일선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진룡 문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약 1600개에 달하는 국고지원 문화사업을 1000개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이르면 내년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 주도의 일회적·소모적 지역 축제나 행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감히 잘라낼 것"이라며 "대신 어떤 방면이든 자발적 활동이 큰 곳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광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관광축제는 전국 42개이며, 이중 광주·전남은 9개이다. 6억원을 지원받는 대표축제는 한 개도 없고, 강진청자축제와 최우수축제(3억원 지원)에 뽑혔다.

또 광주 종장로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등은 우수축제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 7600만원이 지원되는 유망축제는 광주김치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보성다향제, 낙차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5개다.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들 축제는 예산 지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예산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또 지원사업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문화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문화 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 문화계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영광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수법인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문화전당, 문광부가 직접 운영해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 “위탁 운영땀 위상 약화”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호)는 4일 “2015년 준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주도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면 문화전당의 위상이 약화해 대외 협력, 국제교류사업 등 문화전당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위원들은 이어 “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법인가격 경우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전당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운영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설립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5년 문화전당 개관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술·전시 감독 등 전담콘텐츠 개발 책임자를 선

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담콘텐츠에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 등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오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해 광주시와 문화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유아보육법·지방교부세법 7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강운태 광주시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제

출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장인 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영유아보육비 재정분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의 허리는 휘어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 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이 통과돼야 지자체 재정이 겨우 숨을 쉴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과 대폭적인 사무이양으로 ‘3할자치’라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를 소홀히 할 경우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불난집에

전국민 절전캠페인을 응원하는 더위 안심부채

자동차 햇빛 가리개로 활용한 시진을 찍어 #0401로 보내 주시면 즉석 경품 증정! (단, 소진시까지)
* 7월 15일, 매일(토/일 제외) 선착순 100명 베스트리전스·싱글링기드론

여름철 가족 여행을 위한 썸머 안심 패키지

동의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안심 여행을 위한 선물 증정! (단, 소진시까지)
출몰방지패키지 / 미야방지패드 / 해충방지패드 / 상처밴드

가족보장 컨설팅 받으시면 가족안심 경품!

삼성생명 컨설턴트에게 보장/연금 분석을 받거나 동서 작성을 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1등 방수 카메라(15명) / 2등 선용기(100명) / 3등 휴대용 텐트(1000명)

■ 온가족 안심을 위한 삼성생명 대표보험 스마트변액유니버설중신보험 / 스마트Top변액연금보험 / 삼성생명 암보험

삼성생명 SAMSUNG